

---

## 시론



최원목

-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외교정책 자문위원, 대외경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법무부 선진법제포럼 위원
- 싱가포르국립대학 방문교수
-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 연구위원

---

---

## 진정한 검찰개혁을 다시 시작하자

80년대 군부독재 정권은 데모하는 학생들에게 “북한군이 밀고 내려올 빌미를 주니 민주화 잡기 전에 안보부터 잡는게 중요하다.”고 소리쳤다. 지금은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니 법무장관 임명의 독재적 행태는 합리화 된다.”고 소리친다. 30년 전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더 나쁘다. 그런 독재적 행태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고 출범한 현 정부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학생들은 검찰비리로 유명을 달리한 게 아니다. 배 선적기준 안지키고, 그걸 체크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무시하고, 선장은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먼저 도피해버린 몰상식의 합작품이 초래한 비극 아닌가. 또 박근혜 정권말기 우병우 민정수석을 내세워 검찰을 완벽 통제 했기에 여러 권력형 비리의 사단이 난 게 아닌가. 청와대로부터 권력을 분산시키고 상식과 공정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라는 것이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다른 대체인물을 찾을 수 없기에 조국장관을 해임시킬 수 없다는 말은 그자체가 상식에 반하고 불공정한 적폐다. 아무리 양보해도, 세상에 어떤 일이 한사람 밖에는 못하는 일이 있는가. 우리 법조계를 모독하는 말이고, 우리 법학교수 전체를 모욕하는 말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하려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혁을 하려는 건지 386세대 정치인들을 탄압한 보복을 하려는 건지 의심된다.

법원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세우며 특정이념성향의 연구회 출신의 법관들로 요직을 대체시킨 것이 사법개혁의 진실이었다. 외교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30%의 공관장을 민간인사로 채우겠다고 하면서, 민간 공모제는커녕 청와대, 집권당 수뇌부, 민정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의 민간 인사를 추천하고 선발해 해외공관장으로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모두가 선호하는 좋은 지역 위주로 배치해서 직업외교관들은 나머지 비선호지역 공관장 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제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것도 결국 검찰 요직을 특정이념 지향적 민간인이나 검사들을 법무부나 공수처 요직으로 등용하는 것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결국 개혁이라는 기치가 인사물갈이의 수단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런 세력과 인물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고 또 다른 인사적폐 청산의 정치적 빌미를 낳게 되어 적폐청산의 악순환으로 빠지게 된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인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조국식 검찰개혁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인 청와대의 검찰통제의 위험성과 권력형 부패의 아픔을 겪고 국민들이 그걸 청산하라고 대권을 주었는데 박근혜·우병우처럼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까지 만드는 게 개혁이란다. 도 대체 선출된 권력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데 검찰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권력과 공생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이 시대적 적결대상이 된 마당에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게 개혁이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말인가. 법무장관 자리는 대통령이라는 선출된 권력을 보좌하는 민정수석과 달리,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임명된 권력이 아닌 것이다. 임명직 국가공무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임무가 법치주의와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입 검찰총장의 말도 못 들었는가. 장관으로 임명된 순간 자신이 지니는 헌법상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치꾼이 어설픈 논리로 국가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신으로부터 검찰을 멀리 하도록 하는게 진정한 개혁방향인데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촛불혁명까지 겪은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조국식 개혁은 검찰조직 문화 개선과 인권 신장이라는 표면적 목표를 띄우고, 검찰 권력에 대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정치적 장악력 확대를 실질적 목표로 삼고 있다. 정

권 말기에 터지기 마련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칼을 미연에 묶어두기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 물갈이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중플레이’ 식의 개혁은 차기정권에서 또다시 적폐청산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된다. 이율배반적 권력으로부터 검찰권력을 독립시켜 헌법과 국가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견제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의 요체다.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할 게 아니고, 거꾸로 검찰이 독립적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유하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그 대신 검경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단, 수사권조정은 지금처럼 줄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경찰에 대한 민주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수부 축소도 이런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형사·공판부 강화도 마찬가지다. 법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할 게 아니고, 검찰과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념 중립적인 민간 인사들로 감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민주통제다. 경찰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필요치 않다. 다만 특수부 대폭 축소로 인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조건하에 공수처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야 한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공수처 설치안처럼 정치인들이 처장을 복수추천하고 대통령이 고르게 되어 있는 체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찰업무를 정치인 손에 맡겨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공보준칙, 압수수색 관련 준칙 등을 수립하거나 개선하고, 권위적 문화개선 작업도 병행하여 시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검찰의 본연의 임무는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이지 인권을 보호하는 기구가 아니다. 인권검찰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임무를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보호체제를 갖추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기획하고 자문하기 위한 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이념 편향성을 배제하도록 인적구성을 당장 개편해야 한다. 지금은 특정 이념 편향적 변호사단체 구성원이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후속적으로 밟고, 그러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시간에 쫓기듯 진행되는 조국식 개혁은 한번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을 빌미로 권력남용의 견제장치인 검찰 권력마저 장악해 독재로 가는 기반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한국 민주정치 발전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조국을 퇴장시키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을 시작하는 길이다.